

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



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사무관
chhun007@mke.go.kr

그간의 성과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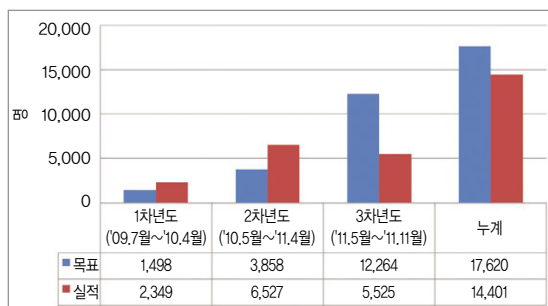
2008년 정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·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도입하여, 전국을 5+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선도산업 육성,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양성 및 30대 선도 SOC 사업¹⁾을 추진 중에 있다.

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사업('09 ~ '11, 이하 1단계 사업)을 통해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였으며,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, LED 등 신성장동력의 산업생태계가 비수도권 지역에 형성되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.

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선도산업·20개 프로젝트에 703개 기업 등 1,10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, 3년간 매출 8조 8천억원(수출 55억불 포함) 및 고용창출 17,600명을 목표로 총 7,6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, 그 결과 광역경제권별로 고용, 매출, 수출 등에서 사업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.

권역	광역경제권별 매출 및 수출 성과	
충청권	2	1,725 , 14.4
호남권	1	2,733 , 4.3
동남권	1	7,882 , 7.7
대경권	1	1,108 , 3.4
강원권	2,461	, 0.8
제주권	6,512	, 1.9

1)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(위원장 : 시·도지사 공동)를 신설하고, 선도산업 육성(지경부), 인재양성(교과부), 30대 선도 SOC 사업(국토부)으로 역할분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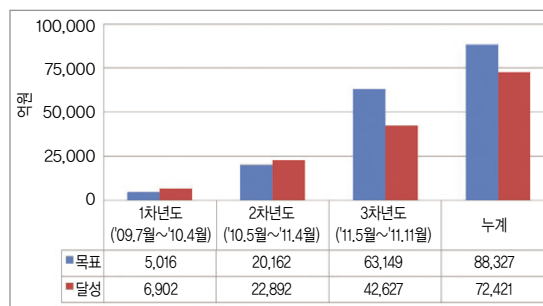
'11년 12월말 현재, R&D 석·박사인력 및 20~30대 청년 인력을 총 14,401명²⁾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, 태양전지, 그린카 핵심부품 등의 유망상품에 대한 기술개발,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총 7조 2,421억원의 매출, 33.3억불 수출을 달성함으로써, 1단계 최종년도인 '12년 4월까지의 당초 성과목표에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2단계 사업 추진정책 방향

2011년 12월,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('12~'14) 사업(이하, 2단계 사업)추진을 위해 각 광역경제권에서 합의하여 제출한 22개 선도산업과 40개 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하였다. 권역별로는 (충청권) 태양광부품, (호남권) 친환경 차량·부품, (대경권) 스마트모바일, (동남권) 그린선박조선기자재, (강원권) 전자의료기기, (제주권) 제주형 품격서비스 등 총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여 광역단위 산업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

이를 위해, 2012년에 500여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2,850억원을 투입하고, '14년까지 약 1,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약 25,000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약 10조원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세부지원과제 선정을 위해 '광역발전위원회' 등 지역주도로 2단계 사업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('11.12.~



12.2.)하였다. 기획 과정에서는 KIAT가 중심이 되어 중앙차원의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가 R&D 정책과의 정합성, 중복성 등을 점검하는 자문활동을 수행하였으며, 중앙에서 추천한 기술전문가들이 권역별 기술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프로젝트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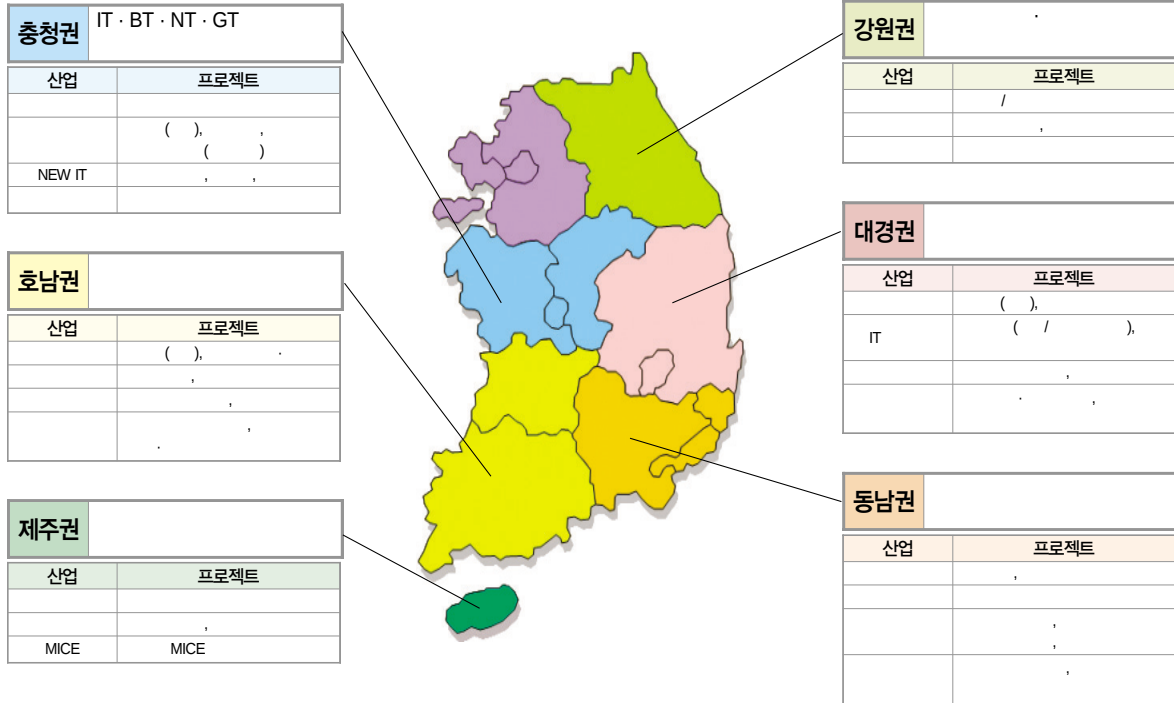
권역별로 제출된 프로젝트 기획 결과에 대해서 '12년 2월 21~24일간 개최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고, 지역산업지원소 위원회(3.12)에서 권역별·프로젝트별 지원예산 규모를 최종 확정하였다. '12년 4월까지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하여 5월부터는 2단계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
한편, 지식경제부는 2단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세부 프로그램을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,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조성³⁾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.

주요 세부 개편내용으로는, 첫째,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지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사업부터는 전체 R&D 사업을 고용창출형 R&D로 전면 전환하여 R&D 사업 주관·참여 기관에게 신규 인력 채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, 매년 고용성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 예산에 차등 반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. 한편,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조건부 R&D를 전체 R&D사업의 10%

2) 호남권(3,619명), 충청권(2,935명), 동남권(2,970명), 대경권(3,211명), 강원권(1,417명), 제주권(249명)

3) 시·도 경계를 넘어 기업지원기관-기업-대학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소재-부품-완성품(시스템) 등 Value chain간의 연계협력을 촉진



규모로 시범 도입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.

또한, 지역기업이 전문학사 및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 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(연봉의 60% 이내, 최대 100만원/월)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현장 기술인력 채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

둘째, 광역경제권 차원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기업 단독 또는 기업-기업간 추진하는 R&D보다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기업-대학-기술혁신지원기관간의 산·학·연 공동 R&D,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&D 등을 우선 선정·지원할 계획이다. 기업의 사업 참여조건을 대형과제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면, 2단계 사업에서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

폭 완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.

셋째,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⁴⁾) 지원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이 권역내 지역기업에 대해 우수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. 기업-대학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지원단-지역기업-선도대학간 '산학협력협의체'를 구성·운영할 계획이다.

마지막으로,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권역별·프로젝트별 사업 추진성과를 매년 중간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30~40%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. 2단계 사업부터는 연차별 평가에서 하위 10% 정도의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를 규정화하여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. 

4) LINC(Leaders in Industry-university Cooperation):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